

대전광역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629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의자 : 정홍근 의원

찬성자 : 강정수, 설재영, 신진미, 함미정,
이원배, 김동성, 최병순, 박용준,
오세길, 박순호(10인)

1. 주 문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도 아직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최근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시행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4. 건의안: 별첨

대전광역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

건의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촌과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농민 공익수당이다.

농가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25년 기준, 농가가 농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은 1,170만 7천 원으로, 농가 전체 소득의 약 21%에 불과하다.¹⁾ 이는 농업만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어민공익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급액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농민 공익수당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전광역시에는 1만 8,837농가가 있으며, 등록 농업인은 2만 9,082명에 이른다.²⁾ 대전이 도시적 특성이 강한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유지하며 시민의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2025년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까지 명시되어 있다.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급된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구와 유성구에서도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자치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실제 수당 지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가 통일된 지급기준과 재정분담 원칙을 수립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농가 18,837가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등록 농업인 29,082명), 2025년 기준.

대전광역시는 이미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예산 편성과 실행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